

경쟁과 투기로 가득찬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민주적 계획과 통제가 필요하다

>> 관련 기사 3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민주적 계획경제가
대안이다 3면

논쟁
시장주의 vs 맑스주의 8~9면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Q&A 4~5면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배경 6면

‘좌편향 교과서’ 공세가 노리는 것
서중석 교수 인터뷰 2면

경제 위기의 덕을 보는 오바마 11면

존 몰리뉴 칼럼 ㉔
- 노사가 협력하라고? 10면



성균관대 사학과 서중석 교수 인터뷰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와 뉴라이트 등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해 온 권위있는 역사학자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를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정부와 뉴라이트, 재계 등에서 기존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하는데요?

[국방부나 재계 같은]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서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과서가 객관적으로 서술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요, 그런 단체의 말을 들어서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잘못을 정확하게 기술해야 가능해요. 잘못된 것도 그대로 기술해야죠. 그런 데서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합리화하려 한다면, 그런 역사 교육은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예전대 해방 직후에 민간인 희생이 엄청났는데, 거기에 군경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성적 차원에서라도 사실을 말해야죠.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은 금성교과서가 ‘북한 교과서를 베꼈다’고 마녀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아 80년대까지 현대사 연구·교육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을 홍보하는 주장들만이 교과서

에 실렸죠.

따라서 학교에서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매우 적죠. 그러니 자신들의 현대사 지식이 지금의 교과서와 차이가 난다면 진실이 무엇인지 찾으려 애써야지, [친북적이라 하느] 태도부터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냉전 이데올로기 잣대로 얘기하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려는 처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을 옹호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넣자는 주장도 하고 있는 데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부정선거를 은폐하려거나 미화하려는 것은 용납돼선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요, 역사를 배우는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지요. 과거에도 권위주의 정권에 아부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옹호하는 주장을 개인적으로 내놨지만, 그러나 그것을 교육하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박정희 유신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등은 이

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마저 미화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또한 민주주의 시대에 독재자나 통치자를 미화하려는 것은 과거의 영웅주의 사관, 엘리트 사관의 연속일 수 있어요. 이것에는 한국 민중은 강압적으로 통치해도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공세의 배경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수정하라고 주장되는 것들은 턱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극단적인 사고가 엿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역사 교과서 수정으로 수구적 냉전 이데올로기를 오늘날에 되살리고, 다원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여러 활동을 억압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6월 민주 항쟁 이후로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것은 그 어떤 정권이라도 민주화의 큰 흐름을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6월 항쟁 이후 민주화의 큰 물결은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인데, 이것을 되돌리려는 발상이라면 그건

안 되죠.

그리고 거의 모든 학회가 참가해 20여 개 역사학회들이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에 우려하는 의견을 발표했는데,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그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나섰겠어요?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민운동이 이런 교과서 수정 요구에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교과서 문제는 역사학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자체, 즉 알 권리와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격이 강해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시민 사회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과도한 교과서 수정 요구에는 지금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를 만들 의도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수구적이고 역대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전(前)단계가 아닌지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어요.

[2011년에] 새 검정 교과서가 나올 것인데, 뉴라이트의 대안 교과서 같은 반(反)민주적이고 잘못된 교과서를 [검인정 받아 학교들에] 내밀지 않을까 우려돼요. 그런 교과서를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저는 현대사 연구를 하면서 마음 놓고 단 한 글자를 못 쓰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만큼 과거 우리 사회가 냉전 의식에 쩌들어 있어서 참 어려웠죠. 저는 그런 게 그동안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되살아나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앞으로 잘못된 교과서가 만들어져 학교에 강요한다면, 그런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직면한 것에 못지않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고 봐요.

인터뷰 · 정리 김영익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수정에 반발하는 역사학자들 — “이승만·박정희 만세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인용해도 될까요?

“국민요정 이명박”, “이렇게 잘하는 정부는 처음”

— 사이버모욕죄를 뱉는 네티즌들의 ‘거꾸로 댓글’

“그렇잖아도 살기 팍팍한데, 국민에게는 아침부터 재수있을 권리도 없나요?”

— 이명박의 아침 라디오 연설을 들은 진중권 교수

“사법부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며 법은 강자의 이익을 대변할 뿐”

— 이견희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을 비판하는 김용철 변호사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환란·핍박 이겨내시고 꼭 승리하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신문 사장 노진환이 이명박의 형 이상득에게 보낸 아부 편지

“아날로그 화법으로 IT시대의 감성을 어루만졌다.”

— 이명박 라디오 연설을 찬양하는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이것이아말로 언론민주화의 살아있는 증거”

— MBC, SBS의 이명박 라디오 연설 중계 거부에 대한 이동관의 해석

“테러왕국 북한을 옹서한 미국은 지금 테러지원국 이 된 셈이다.”

— 조갑제닷컴의 분노

“1퍼센트가 내는 것을 왜 80퍼센트에게 묻느냐.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

— 종부세 반대 여론을 간단히 무시하는 강만수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

— 노동부장관 이영희의 계속되는 막말

왜 민주적 계획경제가 필요한가?

오늘날 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들이 사적 부문을 인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은행에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해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것 — 지난 주 영국 신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핵심 조치다 — 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영불 해협을 건너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조치는 많은 지배자들의 눈에도 아직 충분치 않다. 지난주 금요일 〈파이낸셜타임스〉에 글을 쓴 폴 드 그로워는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일시적 국유화”를 주장했다. 그의 논지는 이런 것이다. 이미 입은 손실과 앞으로 입을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든 은행들이 장기 대출을 중지한 상황에서, 오직 국가만이 이를 책임질 자금과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일단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은행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면 “정부는 다시 은행 시스템을 민영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유화

다시 말해, 국가는 시장 자본주의의 재화를 도우려는 일시적 조치로서만 개입하고 국유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이 조치가 성공하면 국가는 다시 뒤로 빠져야 한다.

이 전략은 명백한 문제를 안고 있다. 즉, 금융시장이 다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답은 아마 규제가 될 것이다. 은행을 규제해 주는 대신 국가는 그들을 더 강력히 규제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이미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대응은

대개 국가가 경제 전반, 특히 은행 시스템을 훨씬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자본주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 제2차세계대전은 이 회생의 토대가 됐다 — 자본주의는 곧 자신을 옥죄 온 국가의 규제망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은 국가 통제를 피해 갈수록 효율적으로 됐다. 결국,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다시 찾아온 경제 위기와 계급 투쟁을 배경으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금융시장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앴다.

지금이야말로 이 롤러코스터에서 다 같이 발을 뻗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듯하다. 더 또는 덜 규제된 시장 자본주의의

넘쳐나는 식량(왼쪽)과 굶주리는 아이(오른쪽)
— 이런 극단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굴레에서 벗어나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적 협력을 다 같이 채택할 때다.

이것은 시장을 없애는 것을 뜻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다. 아마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첫 걸음은 자본주의를 이끄는 눈먼 경쟁을 계획경제로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계획은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로 지금 투자를 하거나 미래 생산을 위해 자원을 아껴두는 일 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집단적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기후변화가 좋은 예다. 오늘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치는 있지만 실제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다. 그것은 서로 경쟁하는 기업·국가

들이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길 꺼리기 때문이다. 계획경제는 체제 전체가 자원을 활용하는 데 탄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소량의 탄소만 사용하도록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계획은, 그 결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엄청난 연봉을 받는, 단지 수천 명에 불과한 은행가들의 멍청한 행동 때문에 이런 재앙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는 데 분노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다.

계획경제 하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생산자와 소비자 등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쟁점에 따라 지역적·전국적·세계적 수준에서 운영될 것이다.

계획은 우리의 목표와 자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또, 민주적일 것이다. 물론 지배자들 중에는 ‘계획’이란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 국유화 조치도 [그들 말마따나] ‘빌어먹을’ 계획의 일종이다. 정부는 돈을 빌려 줄 기업들을 결정해 자원을 배분하는 일에 개입할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결정에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배제될 것이고 여전히 기업의 이윤이 핵심 고려 사항이 될 것이란 점이다.

우리에게 이 믿지 못할 체제를 영구히 대체할 진정한 계획경제 체제가 필요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이명박의 라디오 연설 —

역겨운 ‘고통분담’론에 또 속으라고?

전지윤

노동자·서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IMF 위기를 벗어났던 한국 자본주의가 지금 다시 숨을 헐떡거리며 응급실로 실려 와 있다.

이명박은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환율 급등 수준은 국가 부도 위기에 빠진 아이슬란드와 맞먹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아시아의 아이슬란드인가?’라는 기사를 실었다. 더구나 이명박이 그토록 찬양하며 모델로 삼던 중동의 두바이가 ‘디폴트로 이번 위기의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들린다.

지배자들은 한국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서민의 피와 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달려 모으기’를 위한 ‘자발적 국민 캠페인’에 나섰고

〈조선일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나눠 질 각오”를 요구했다.

이명박이 라디오 연설에 나선 것은 이런 ‘고통분담’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그랬듯이 말이다.

10월 13일 첫 연설에서 이명박은 ‘경비로 일하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의 예를 들면서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구역질나는 논리를 다시 꺼냈다. IMF 위기 때도 바로 이 논리에 따라 많은 노동자·서민이 고통을 감수했고 그것은 곳곳에서 끔찍한 비극을 낳았다.

해고, 생활고, 가정 해체, 노숙자 전략이 꼬리를 물었고 많은 노인들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싫다’며 목숨을 끊었다.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일시적으로 살아났지만, 노동

자·서민의 삶은 살아나지 않았다. 극단적인 비정규직 확대와 양극화가 있었을 뿐이다. 얼마 전, 실직한 남편과 이혼하고 식당 일을 하던 두 아이의 어머니가 “신발이 작아 발 아프다는데 못 사 줘서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은 IMF 때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IMF의 기억

이명박은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는 게 평소의 제 소신”이라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살리자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주던 숙식비마저 빼앗으려 한다. 이것은 경제 위기라는 비가 오는데 우산을 뺏고 아예 물대포를 퍼붓는

셈이다. 이명박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마련”했으니 “빨리 처리”하자는 “법안”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다.

다행히 이명박의 라디오 연설은 MBC와 SBS의 거절로 KBS 한 군데에서만 내보냈다. KBS도 “정례 연설은 결정된 바 없다”는 멘트와 함께 곧바로 민주당 반론 연설을 내보냈다. 반년 간 매달린 방송 장악 시도의 결과가 이것이라니 애처로울 정도다.

한국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살리려고 노동자·서민의 피땀을 한 방울이라도 더 쥐어짜려는 이명박의 시도는 모조리 좌절돼야 한다. 이봉화의 쌀 직불금 파문이 보여 줬듯이 저들은 고통을 분담할 생각이 조금치도 없다.

〈한국경제신문〉은 “최근 노사분규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 파업 지속일수와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나고 장기파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자와 노동조합 활동가 들은 ‘고통분담’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요구(12명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참고하십시오)을 내건 투쟁을 주장하고 건설해야 한다. 응급실로 실려 온 한국 자본주의라는 괴물에게 우리의 피를 헌혈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봄 앤 버블》(로버트 브레너, 정성진 역, 아침아침)

세계경제 위기의 뿌리를 캐낸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최근 레이건·대처 식 자유시장 자본주의 모델은 끝났으며, 시장에 대한 국가 규제와 공공 기능 정상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인류에게는 자유시장 자본주의만이 허용돼 있다는 ‘역사의 종말’을 주장해 악명 높던 자다.

그토록 광적으로 시장을 옹호하던 자가 내놓는 대안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까? 시장을 적절히 규제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왜 이런 위기가 자주 재발하는 것일까?

지금 위기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으려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뤄야만 한다. 그 점에서 로버트 브레너의 《봄 앤 버블》은 유용한 통찰과 자료들을 제공한다.

2002년 이 책이 출간되기 직전에 ‘신경제’를 이끈 정보·통신 관련 주가가 대거 폭락하면서 위기가 도래했다. 바로 그 직전까지도 정보·통신 부문의 혁신을 통해 영원한 번영과 성장이 가능한 새로운 모델이 생겨났다는 주장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저자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신경제’ 호황과 이를 옹호하는 주장들의 취약성을 밝히 드러낸다.

구조적 문제

저자는 근본적으로 세계경제가 1970년대 이후 위기를 되풀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체제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방대한 통계를 분석해 이를 입증한다. 이윤율이 일시적으로 회복되면서 호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때의 이윤율 수준도 제2차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장기호황 시기에는 훨씬 못 미쳤다. 이윤율을 떨어뜨리는 근본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호황은 규모가 작았고 오래가지 못했다.

경제 위기의 원인을 단지 금융시장의 투기적 속성에서만 찾으려는 피상적 견해들과 달리, 저자는 생산 부문에서 발생한 문제에서 출발한다. 세계 시장에서,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경쟁이 격화해 생겨난 생산과 설비의 과잉 때문에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윤율이 하락했다.

저자는 생산 부문에서 발생한 문제

가 금융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잘 설명한다.

앨런 그린스펀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저금리를 통해 주식시장을 부양하려 했고, 미국 기업들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자기 회사의 주식을 구입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자산이 늘어난 기업과 부유층이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면서 이윤율 하락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덕분에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다른 나라들도 송통이 열렸다. 이 나라들이 수출로 번 돈을 다시 미국에 투자하면서 선순환이 형성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이 실제 획득하는 이윤 수준과 주가 사이의 격차가 커져 갔고, 이미 생산과 설비가 과잉인 부문에 투자가 늘면서 이윤율이 악화됐다. 결국, 2001년부터 주가가 폭락하고 실물 경제가 둔화하면서 호황은 끝나고 위기가 시작됐다.

1990년대 후반에 미국 경제에서 금융 거품과 부실이 만들어지고 끼치는 과정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오늘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기본적으로 지금의 위기는 이 과정이 최근까지 지속되면서 더 거대한 거품과 부실을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독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약점도 있다.

브레너의 분석은 맑스주의 경제학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영향력 있는 개념으로 떠오르게 하는 데 기여를 했지만, 이윤율이 저하하는 원인에 대해 브레너의 설명은 잘못됐다. 그는 맑스가 제시한 이윤율 저하에 대한 설명을 기각하고, 경쟁 때문에 상품 가격이 변동하는 것으로 이윤율 저하를 설명한다. 그러나 맑스의 관점은 착취율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오로지 자본의 ‘유기적 구성’(생산과정에서 기계, 원료 등의 물적 요소의 가치와 임금 사이의 비율)이 커질 때만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약점이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방식과 근본적 한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은 이 책에서 분명히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상우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파이낸셜타임스〉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위기를 경고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있는 **근본 원인**과 **투쟁 과제**에 대해 Q&A로 정리했다.

Q. 한국 경제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물론 세계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특히 세계경제의 중심부인 미국·서유럽이 위기의 근원이기 때문에 위기의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런데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몸살이 걸리는’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규제 완화를 추구해 온 지배자들이다. 지배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이런 방향과 정책에 가속도를 높여 왔다. 그러나 지금 위기는 이런 방향이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지 김영삼 정부의 정책 실패나 외환자유화 때문이 아니었다. 고도성장 속에서 계속된 과잉투자·설비가 낳은 이윤율 저하의 위기였다. 1990년대에 한국 경제의 이윤율은 1970년대의 3분의 1로 줄어든 상태였고 1997년 타이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이런 근본적 문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외국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왔다. 당시에 대규모 차입에 의존하던 몇몇 대기업들이 파산했고 대형 은행 부실로 이어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위기에 대처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등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서 수익성을 만회하려 했다. 덕분에 비정규직은 급증했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했다. 그러나 낮은 이윤율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하고 위기가 시작될 때인 2000년부터 신용카드 규제 대폭 완화와 소비 진작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그러나 저임금 비정규직의 급증 속에 신용카드 호황은 오래갈 수 없었고, 결국 2002년에 거품이 꺼지며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는 혁신도시, 행정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을 추진하며 1백조 원이 넘는 토지보상금을 풀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물론 부동산 거품을 막는다며 대책을 내놔지만, 분양원가 공개조차 한사코 거부하는 노무현의 친시장 정책은 거품을 막을 수 없었다. 당시 거품을 키우고 있던 미국 등에 수출이 확대된 것도 한국 경제의 문제들을 가리는 구실을 했다. 나아가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등을 더 강화할 한미FTA까지 추진했다.

이렇게 노무현이 닦아 둔 고속도로 위에서 이명박은 돌진하려 했다. 이명박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도 747 사기를 치고 광우병 쇠고기까지 수입하면서 한미 FTA를 추진해 왔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지금 세계경제 위기의 수렁 속에 허우적대고 있다.

Q. 제2의 MF 위기가 올 것인가

세계적인 달러 신용 경색이 일어나자 한국 경제는 IMF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과 외환이 경색되면서 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금융기관과 기업 들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단기외채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미국 정부가 7천억 달러, 유럽 각국이 2조 달러를 펴주어 많은 은행들을 국유화하기로 함으로써 환율 폭등은 일시 진정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 같은 수출 대기업들을 압박해 달러를 내놓도록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벌들은 수백억 원의 환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만 55조 달러가 넘고 그 중 상당액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올해 들어 자동차·가전제품·반도체 등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석유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8월 말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1백 15억 7천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올 들어 외국인 주식 순매도로 4백25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게다가 부동산 거품과 가계 대출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가계 빚이 6백60조 원을 넘어서고, 부동산 담보 대출은 8월 말 3백7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금리는 상승하면서 위험이 커졌다. 아파트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들의 부채 80조 원도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만큼 외환·신용 경색과 부동산·중소기업 대출 부실 등이 결합돼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Q. ‘MB노믹스’가 경제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될까?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하던 대로 하기”다. 현재 미국에서 위기를 낳은 정책들을 그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신

자유주의를 통렬히 비판해 온 폴 크루그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첫째 대책은 ‘노동자·서민 피압 쥐어짜기’다. 물가 폭등을 방지해 온 정부가 임금 동결을 강요하고 있다.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 임금 삭감이다.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려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깎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속박비 지원까지 끊으려 한다.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착취를 강화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IMF 이후의 착취를 강화해도 지금 위기가 다시 온 것은 이 때문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늘리는 정책은 내수 위축 문제만 더 악화시킬 것이다.

둘째 대책은 ‘부자 감세’다. 이명박 정부는 중부세 등 기업주·부자의 세금을 대폭 깎아 줬는데 그 규모가 무려 전체 예산의 5퍼센트에 이른다.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감세는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는커녕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외환위기 가능성을 더 높일 것이다. 실물 경제의 낮은 이윤율 문제가 여전히 상황에서 감세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도 어렵다.

셋째는 공기업 민영화다. 감세로 생길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다국적기업과 재벌 들에게 돈벌이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의 대표적 민영화 사례를 보면 민영화 이후 적자를 줄이려다 대형 사고가 빈번해지고 결국 파산하거나 재국유화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결과만 낳았다. 민영화는 공기업 노동자들의 해고와 구조조정, 요금 인상과 공공서비스 악화만을 낳을 것이다.

넷째는 금융 규제 완화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등이 그것인데 ‘삼성 은행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GE(제너럴일렉트릭)도 금융업(GE캐피탈) 진출로 지난 몇 년 동안 경이적인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는 금융 거품으로 산업 부문의 손실을 숨겨 온 것뿐이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심화하자 GE의 주가는 1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자산규모도 2천억 달러 이상 줄었다. GE의 사례는 이명박의 금융 정책이 낳을 위기를 보여 준다.

이처럼 MB노믹스의 핵심 정책들은 모조리 위기를 심화할 ‘역주행’ 정책들인데다 최근 갈팡질팡하면서 들이치는 단기 처방들도 헛발질뿐이다.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한 금리 인하는 국내 은행에 돈을 빌려 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회수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조처는 외환위기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지금의 위기는 단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다. 지금 미국·유럽·중국·일

본 등이 모두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정한 정책이나 모델이 위기의 원인도 해법도 아닌 대안부재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일단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듯하다.

Q. 노동자·서민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통분담해야 하는가?

노동자들이 양보하고 고통을 감수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오래된 거짓말이다. 30년여 전 시작된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 레이건 정부가 내놓은 해법도 이것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탄생 배경이다.

그 결과 1980년대 미국에서는 경제가 성장할 때도 고용은 늘지 않고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희생의 결과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오늘날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실질임금 하락과 복지 축소 등 고통분담을 당해야 했던 미국 노동자들은 지금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IMF 당시 한국 정부와 주요 경제학자들의 논리도 똑같았지만 그 결과 비정규직만 늘고 양극화는 심해졌고 경제 위기는 다시 찾아왔다. IMF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득 하락과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화 등에 시달리는 동안 재벌·부자는 돈과 땅만 불려 왔다.

노동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입한 펀드 통장은 지금 깡통이 돼 버렸고,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 이는 정부가 부추긴 것이다 — 빚을 내 장만한 집은 어느새 월급을 몽땅 쏟아 부어도 유지할 수 없는 애플단지가 돼 버렸다. 그런데 이명박은 다시 ‘경제를 살리자’, ‘기업을 구하자’고 하면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달러 모으기’를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위기에 처한 노동자·서민의 삶이다. 물가인상 속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대 정유사가 올린 영업이익이 무려 3조 4천억 원이 넘었다. 이런 이윤을 물가 인하와 임금인상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재벌·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서 노동자·서민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

‘재벌천국·서민지옥’을 앞당길 한미FTA,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법 개악 등은 저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와 재벌·기업주에 맞서는 대중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체제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이 민주적·집단적으로 통제하고 계획하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읽어 보세요!

1929년 대공황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 값 1천 원

미국 패권의 균열이 낳은 부시의 굴욕

한규한

미국이 결국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서 제외했다. 사실, 그동안 술한 침략 전쟁을 하고, 제3세계에서 우익 반군·테러리스트들의 학살과 파괴행위를 지원한 사상 최악의 테러지원국인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위선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려고 자의적으로 이 목록을 작성했다.

북한이 이 명단에 오르게 된 계기는 1987년 김현희의 KAL기 폭파 사건 때문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우파들은 이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으니 본격적인 시장 개혁과 개방에 나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동안 빚장을 건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던 것이다. 자유시장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하던 미국은 정작 북한의 WTO·IMF 등 국제기구 가입을 막아 왔고, 2002년 북한이 ‘시장주의적’ 개혁에 나섰을 때도 이를 무시했다. 미국의 진보적 외교정책 전문가 존 페퍼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당나귀 일화에서처럼 북한이 당근을 잡으려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을 때마다, 당근은 늘 같은 거리에서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존 페퍼, 《남한 북한》)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에게서 당근 한 개를 잡아챌 수 있었다. 애초 부시는 테러지원국 해제 합의를 미루며 시간을 벌어 보려 했지만, 시간은 부시의 편이 아니었다.

북한은 미국의 합의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불능화 작업을 중단했고, 곧 국제원자력기구 요원에게 출국을 요구했다. 심지어 북한은 2차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되면 5년을 맞은 6자회담은 사실상 붕괴하고 미국의 위신은 추락할 터였다.

부시는 브루킹스 선임연구원 마이클 오핸런의 푸념대로 “[유화책을 쓰는 강경

책을 쓰든]될 해도 손해”인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지배자들은 심하게 분열해 있었다. 유엔 핵 사찰단원으로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미국의 검증안이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탐할 권리”를 달라는 것이며 “어느 주권국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결국, 부시는 파국보다는 민망한 후퇴를 택했다. 〈뉴욕타임스〉는 테러지원국 해제가 “부시에게는 드라마틱한 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부시에게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을 것이다.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지목한 북한이 바로 부시에 의해 핵까지 보유한 ‘정상국가’가 된 셈이다. 게다가 철저한 검증 없이 테러지원국 해제는 없다고 큰소리 친 게 불과 몇 주 전이니 민망함이 더 할 것이다.

“98퍼센트 북한의 승리”라는 네오콘 존 볼턴의 분노에서 보듯이, 이번 합의안의 내용은 명백히 부시의 패배다. 부시는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에 유리한 ‘이적행위’를 했다는 조롱까지 받았다.

10월 7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 급속히 증강된 군사력을 과시한 한국 해군. 이날 북한은 서해상에서 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 북미 유화국면도 이런 군비경쟁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요소가 핵 검증 패키지에 포함됐다”며 우파들을 달래려 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핵심 쟁점이던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은 북한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해졌다. 신고된 시설에 대한 검증을 먼저하고 고농축우라늄 문제 등 미국이 의혹을 제기하던 미신고 사항에 대한 검증은 나중에 미루자(이른바 분리검증)는 것인데, 이는 결국 지난번 합의를 반복한 것이다. 그때와 다른 것은 미국이 실제로 테러지원국 해제에 나섰다는 것뿐이다.

여전히 멀고도 험난한 길

이번 검증안 합의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어려운 문제는 다시 뒤로 미뤘고, 따라서 본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당선이 유력한 오바마는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조처를 지지하면서도 “만약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최근에 철회한 제재를 다시 가하며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시료 채취 문제도 모호하게 처리됐는데, 그동안 북핵 협상에서 이런 모호성은 나중에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곤 했다.

게다가 테러지원국 해제가 자동으로 북한의 세계체제 편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미 국무부는 우파들의 반발을 의식해 마약, 위폐 관련 등 19개의 제재가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당장에 북한에 가장 필요한 해외차관 도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와 함께 아시아개발은행 가입을 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1996년에 미국은 북한이 4자회담에 참가하는 대가로 아시아개발은행 가입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의 신청서를 거부했고 미국은 이를 방조했다.

무엇보다 남한, 일본 등 주변국들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현실 자체가 북한핵의 완전한 폐기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핵무기는 북한 지배자들에게 생존 수단이기 때문이다.

왜 부시는 고개를 숙이게 됐을까

일부 사람들은 핵실험 등 북한의 강경 대응이 이번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보지만, 이는 일면적인 분석이다. 사실, 초보적 수준의 북한핵 자체는 미국에게 위협이 못된다. 재래식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다.

핵심은 미국 패권 전반의 위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수렁에 빠져 있다. 최근 미 국방장관이 “탈레반과도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은 고전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을 강타한 경제 위기는 가뜰이나 지나치게 확장돼 있는 미국의 군사적 능력을 제한하고 미국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이 북한에 숨 쉴 공간을

넓혀 준 것이다.

김정일 와병설이 한창이던 시기에 미국의 양보조처가 나왔다는 점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시기를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당시 미국은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동북아 불안정을 우려해 북핵 위기를 봉합하는 제네바 합의에 나섰다. 얼마 전 존 페퍼는 “[김정일] 정권 몰락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이야말로 예측 불가능성을 극대화하는데 미국은 그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을 6자회담에 묶어 두고 여전히 핵 폐기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변국에 던지기 위해 부랴부랴 양보했던 듯하지만, 이는 또

다른 모순을 낳았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무시한 채 테러지원국 해제에 나선 미국에 배신감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다. 이런 반응은 자민당·민주당을 가리지 않았다. “미국에 의존하려 한 것이 잘못”(민주당 간사장 하토야마 유키오)이라는 것이다.

배신감

남한 우파들도 미국에 대한 분노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 원칙없는 양보”라고 한탄했고, 이회창은 “핵을 가진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 재앙의 시대가 열[렸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물론 대북

강경태도이던 이명박은 뽀죌하게 부시의 조처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말이다.

이래저래 미국은 위기관리 능력 저하를 감추지 못했고, 패권에 대한 의구심만 키우는 꼴이 됐다. 따라서 북미 유화국면 속에서도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북미 유화국면이 자동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벌이는 제국주의적 경쟁과 상호견제, 군비증강이 이 지역의 불안정과 긴장의 진정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북한핵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 강제하기’가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공상이다.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제적 차원의 반전·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 기구’ 발족에 대해

김광일

조계사 촛불 수배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다함께’ 운영위원

10월 9일 열린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
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는 10월 25일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 기
구’(이하 민민련) 준비위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다함께’는 촛불시위가 절정이던 6월
초부터 이미 이런 연대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때 광우병국민대책회
의가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포괄적인 공
동전선으로 전환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다.

그 점에서 민민련이 이제야 발족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고 지난 촛불시위의 여
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
다.

그렇다고 민민련의 의의를 찾을 수 없
는 것은 아니다.

먼저, 민민련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
입 반대라는 비교적 제한된 쟁점을 중심
으로 활동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보다
의제가 포괄적인 장점이 있다.

또 다른 저항의 분출에서 민민련이 정
치적 상징 구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10월 9일 비상시국회의에는 한국
의 주요한 시민·사회 운동 단체들이 참
가했다.(다만, 다함께를 제외한 급진좌파
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 단체들이 그동안 쌓아 온 영향력 때
문에 운동이 분출할 때 또다시 주도적 구
실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민민련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석형 위원장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반독재 국민전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민련에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동조합 고유의
쟁점보다 더 포괄적인 정치 운동에 적극
성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국민전선”에 보이
는 열의가 파업 등 노동계급의 독자적 행
동을 대체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면피 수



단이 돼서는 곤란하다. 경제 위기 시대에
는 더욱 단호한 투쟁만이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우려

다함께는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도 개혁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민민련 준
비 기획단과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했다.

그런데 민민련은 발족 과정에서 논쟁
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요한 쟁
점은 계급연합에 관한 것이다.

자본가 계급의 정당인 민주당을 민민
련에 포함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는 준비
논의 때부터 중요한 쟁점이었다. 준비 기
획단에서 다함께는 민주당 초청을 반대

했지만 다수의 의견에 밀려 10월 9일 비
상시국회의에 민주당도 초청 명단에 포
함됐고, 민주당은 비상시국회의에 참석
했다.

10월 9일 비상시국회의에서도 다함께
는 민주당이 참가해서는 안 되고 진보정
당들의 참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
건의료단체연합, 전민련, 진보신당도 같
은 맥락에서 주장했다.

그러자 민민련을 주도하는 개혁주의자
들은 아예 정당 배제를 타협안으로 내놓
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뿐 아니라 민주노
동당과 진보신당 같은 진보 정당들도 함
께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민주당과는
그 계급적 기반과 주장, 실천에서 근본적
으로 다른 진보 정당들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동안 세계사회포럼을 비롯한 국제
반신자유주의 운동에서도 개혁주의자들
의 ‘정당 배제’는 정확히 ‘좌파 정당 배
제’였다. 개혁주의자들은 급진좌파 정당
들은 배제하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프
랑스 사회당, 브라질 노동자당 등과 관계
를 맺고 이들을 추수했다.

민민련 주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라는 수사에
는 계급연합의 개념이 포함돼 있는 듯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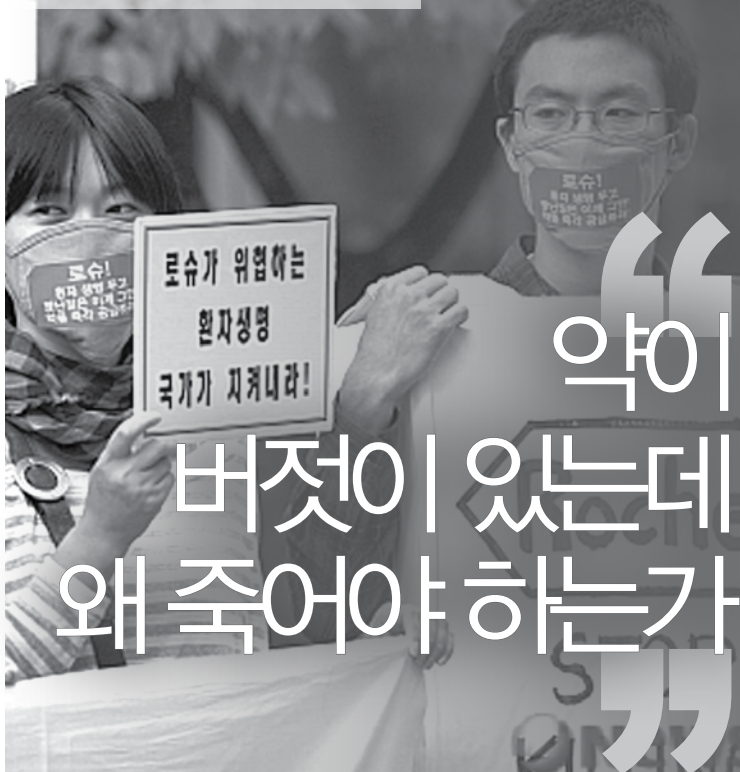
물론 ‘1퍼센트 최상위 부유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좌절시키는 것은
사회 운동의 중요한 임무다. 그러나 그 대
안이 민주당 같은 자본가 정당까지 포함
하는 99퍼센트의 단결과 연대일 수 있을
까? 그 99퍼센트에 재벌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노동계급과 피억압자들의 이
해에 반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것은 트로츠키가 1930년대 프랑스
공산당의 계급연합 전략인 국민전선을 비
판했던 대목을 떠올리게 한다. 프랑스 공
산당은 “2백대 가문에 맞선 국민적 투쟁”
을 강조했는데, 트로츠키는 “그 2백대 가
문은 공중에 봉 떠 있는 게 아니라 금융자
본 체제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다. 2백대 가문을 타도하려면 경제·정
치 체제를 전복해야 한다. 프랑스 공산당
이 주장하듯이 한층밖에 안 되는 재벌에
맞서는 국민적 투쟁이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에 맞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
이 있어야 한다” 하고 비판했다.

이런 우려가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민민련의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계다
가, 발족 단계에 있는 민민련은 아직까지
실천을 통해 선진 활동가들에게 입증되
지 않았다.

따라서 변혁적 사회주의자들은 경계심
을 늦추지 말고, 독립적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면서 여기에 개입해야 한다. 동시
에 경제 위기에 저항하는 노동계급과 피
억압자들의 독립적 요구를 분명하게 하
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행동
해야 한다.

10월 7일 로슈 규탄 국제공동행동 한국 집회



정을
(에이즈 인권연대 나누라+)

“약이 버젓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까?”
10월 7일 서울 대치동 로슈(다국적 제약회사) 건물 앞
에서 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절규가 터
져 나왔다. 이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수 에이즈
치료제를 한국에 공급하고 있지 않은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를 상대로 벌인 국제 항의시위의 마지막 날이었다.
프랑스 Act Up Paris(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 :
권력 해체를 위한 에이즈 연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
번 국제공동행동에는 앞서 프랑스, 태국, 미국의 HIV 감
염인과 활동가들도 함께했다.

로슈가 생산하는 푸제온은 이전 HIV 약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그런데 로
슈는 정부와 약가 협상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푸제온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로슈는 연간 2천2백만
원을 약값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에 버금가는 약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 누구의 상식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가격

은 이미 한국에서 시판된 HIV 치료제 중 가장 비싼 약의
두 배에 이른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살아가는
감염인들에게 푸제온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가사회권에 참가한 에이즈 인권연대 나누라+ 윤가브리
엘 대표는 푸제온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다. 한국에 공급되
는 치료제에 모두 내성이 생긴 그에게 푸제온은 삶을 연장
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였지만 로슈는 그 약을 공
급하지 않았다. 그는 외국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
독한 순간을 모면했지만 한쪽 시력을 잃은 뒤였다. 보청기
를 사용하지 않으면 귀도 잘 들리지 않게 됐다.

이미 2004년 5월에 식약청 허가까지 받았는데도 그
약이 필요한 환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과연 누구
의 탓이란 말인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몸이 아파도 치료받을 권리조차
제한받는다. 제약기업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약을
공급하지 않고, 정부는 시장경제를 들먹이며 기업을 통
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사이 환자들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푸제온을 당장 공급하라!”

이론 버틀러

대인간 같은 자본주의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몇몇 사람들은 이 붕괴가 불가피했다고 여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자본주의를 더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가 스스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도록 놔두지 않고 너무 많이 통제하고 규제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977년 미국 정부는 모기지 대출 회사를 만들어 가난한 지역 사람들에게 대출을 늘리도록 했다. 가난한 서민들이 집을 사도록 돕는다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대출 회사들은 돈을 실제 갚지 못할 사람에게도 모기지 대출을 해 줬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서브프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로부터 8년 뒤, 미국에서 7백 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도산한 저축대부조합 위기가 찾아왔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개입해 규제 보따리를 풀었고, 은행들을 통합시켜 '망하기엔 너무 크게' 만들었다. 참 잘한 일이다, 그렇지 않나?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1990년대 말 금융 위기로 러시아·아르헨티나·멕시코 정부가 지급불능을 선언하던 9·11 테러가 일어나든 미국

정부는 단지 달려들 더 짝어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한편, 영국에서 고든 브라운은 검은 세금보다 약 2천8백억 파운드를 더 썼고 엄청나게 많은 현금 이 시장에 유입됐다. 그래서 중국·인도 같은 신흥공업국에서 값싼 공산품이 수입돼 물가가 떨어져야 마땅할 때, 영국 중앙은행은 오히려 물가가 2퍼센트 상승하도록 방지했다.

모두가 잔치 분위기였고 샴페인이 터졌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정부가 마구 찍어낸 '장난감 돈' [가치가 부풀려진 돈]으로 뒷받침된 것이었다. 이것이 계속될 순 없었고 지금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동안 규제 당국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한 것일까? 그들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다가오는 은행의 연쇄 파산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문제가 터진 뒤에는 닢대거리처럼 행동했다.

정부가 끔찍한 침을 나눠주고 규제 당국은 바에서 술이나 마시는 일종의 도박판에서, 일부 노름꾼들은 판돈을 위험 수준까지 올렸다. 그러나 비난받아야 하는 대상은 도박판 경영자지 손님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는 규제와 정부의 위기지 자유시장 경제학의 위기가 아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지

는 일반 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서 안 된다. 중국은 현재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고 지금도 매년 8~10퍼센트씩 성장하고 있다. 다른 신흥공업국들도 강력하다. 심지어 경제 위기가 심각한 와중에도, 경제학자들은 내년 세계경제가 아마 4퍼센트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최근 영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것이다. 따라서 세계 시장 경제는 여전히 역동적이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인도와 같은 경제들이 정부가 아니라 무역과 시장에 기대 성장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추구했다. 그 결과 고생한 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장 체제 덕분에 빈민 수십억 명이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고 약간의 기호품도 소비할 수 있게 됐고, 자기 자본을 모아 개인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시장은 이들과 그 가족들이 자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 줬다.

시장은 거대한 국제 협력 체제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은 아마도

“시장을 너무 많이 통제하고 규제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남아메리카산(産) 가죽과 인도산(産) 염료를 수입해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리스 선박에 실려 영국 도매업체에 전달됐을 것이다. 이런 상호의존은 평화를 유지하는 강력한 힘이다. 기업인들은 병사가 아니라 상품이 국경을 넘길 바란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다름아닌 정부다. 이라크에 개입한 것은 토니 블레어지 스코틀랜드 은행이 아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의견이 각기 다를지라도 서로 협력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나는 이란 정부에는 호감을 갖지 않지만, 이란 농부들이 만든 잘 익은 대추는 좋아해 자주 사 먹는다.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 둘 다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시장은 고도로 효율적이면서 자율적인 체제다. 부족이나 잉여가 발생하면, 가격 변화가 일어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한다. 수많은 사람과 그들이 가진 정보가 이 과정에 투입된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시장은 중앙집중적 계획보다 우월하게 작동한다.

시장은 재산과 신뢰를 보호하는 규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자들을 조종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이런 규칙들을 유지하는 데 더 신경을 썼다면 상황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시장은 전 세계에 부를 확산시키고, 사람들이 자기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속될 수 있다.

자유시장이 잘 돌아가면 양쪽 모두 이득을 본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환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교역이 더 많을수록, 상호 이익이 더 커진다. 한때 폐쇄적이었던 나라가 세계 무역 체제에 동참하는 등 교역이 세계에 확대되는 것은 참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부유해질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시장은 부를 만들어 낸다. 반면 사회주의 나라들은 부를 그냥 탕진했다. 몇몇 나라들은 좀더 먼저 생산적인 자본을 창조했고 여전히 앞서가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정치인들의 보호무역주의만 없다면 선진국을 따라잡고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아말로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천국이 아닐까? 하먼은 큰 정부에 맞선 투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친(親)시장 싱크탱크 아담스미스협회의 수석 연구자 이몬 버틀러와 반자본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 크리스 하먼이 오늘날 경제 위기를 둘러싼 흥미있는 논쟁을 벌였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위크〉 2123호에 실린 이 기사는 〈저항의 촛불〉 독자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시장주의 vs 맑스주의

크리스 하먼

금융 위기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시장의 경이로움에 관해 들어온 얘기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보여 준다. 그런 이야기들을 앞장서 떠들어댔던 바로 그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이제 1930년대 초 규모의 위기를 피하려면 국가가 개입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늘 위기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었다. 자본주의는 이윤과 축적을 향한 맹목적 경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가들은 신용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다가 그들의 이윤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그레 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팔사납게 나자빠진다.

19세기에 자본주의 위기들은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피해를 줬고 노동자들에게는 끔찍한 재앙을 가져왔다. 그러나 사회 최상층의 입장에서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본가들은 소수의 파산에서 이득을 챙겼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이론가들은 정부 개입만 없으면 자본주의가 번영을 가져올 거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그런 이론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 위기는 저절로 해소되지 않았다. 개별 기업들의 규모가 너무 커진 나머지 그들이 파산하자 다른 기업

들도 타격을 입었다.

거의 모든 천자본가 경제학자들이 국가가 개입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설파한 종류의 개입으로는 혼란을 끝낼 수 없었다. 기껏해야 미국에서만 짧은 회복이 있었고 1937년이 되자 새로운 문제들이 발전했다. 위기가 끝난 것은 오히려 제2차세계대전 덕분이었다는 데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한다.

그럼에도 제2차세계대전 후 30년 동안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에 내재적 결함, 즉 약간의 국가 개입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결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1974년과 1980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케인스가 설파한 자본주의 교의에 따른 국가 개입 시도들은 그런 공황들을 끝낼 수 없었다.

많은 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이 하룻밤 새에 태도를 바꿨다. 전에 그들은 위기는 국가 개입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었다. 이제 그들은 개입 자체가 문제라고 비난했다.

시장을 그냥 방치한 로널드 레

“금융 위기는 극소수 ‘기생충들’이 아니라 부패한 체제 전체의 문제다”

이건과 마거릿 대처 정부의 초기 정책은 심각한 위기를 더 악화시켰 뿐이었다.

그러자 레이건은 막대한 군비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 국가를 이용했다. 1987년의 주식시장 붕괴 때 영국과 미국 정부는 모두 중앙은행들을 통해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어야 했다.

물론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거짓말이다. 시장은 늘 자국 경제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증진하려 애쓰는 국민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경제적 경쟁이 국가들 간의 군사적 경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 체제가 그토록 불안정해지고 전쟁으로 나아가기 쉬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레이건과 대처 하의 자유시장이란 부자맞춤형 [국가] 개입과 나머지 대다수에 대한 신자유주의 강요를 뜻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는 — 1990~1992, 1997~1998, 2001~2002년에, 그리고 다시 지난해에 —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앞선 위기들로부터의 회복은 갈수록 부채에 의존했다. 은행들에 대한 정부 규제의 제거는 부채 규모를 엄청나게 늘렸다.

신용 대출 덕분에 전 세계에서 — 미국과 영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에서 — 기업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판매할 수 없었을 상품들을 위한 시장이 생겨났다.

대출 호황은 붕괴했고 그와 함께 은행들도 파산했다. 이것은 단지 극소수 “기생충들”이 아니라 부패한 체제 전체의 문제다. 우리는 시장이 영국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줄 거라고 들어 왔다. 서방 정부들의 압력 아래 시장 자유화 물결이 남반구 전체를 강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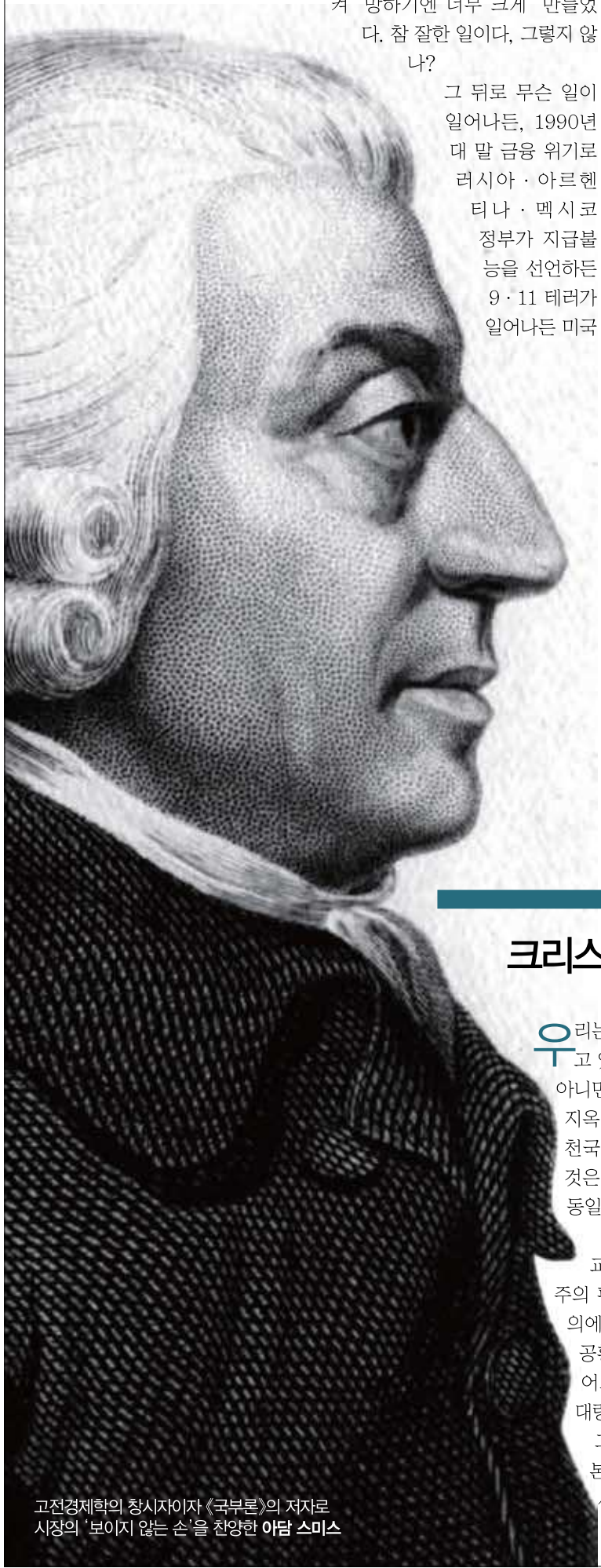
번영은커녕, 이것은 — 국가 내에서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 — 엄청난 규모의 심화하는 불평등을 초래했다.

그 때문에 많은 빈국 경제들이 세계 시장에 완전히 의존하는 처지가 됐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에 곤경을 야기하고 있는 위기가 남반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체제를 구하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최근 시도들은 기껏해야 우리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도들은 시장이 파괴적이고 혼란으로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사회를 운영하는 상이한 방식 — “자유시장”이나 상명하달식 국가계획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부를 창조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 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윤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 조직되는 체제, 즉 사회주의가 필요하다.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이자 〈국부론〉의 저자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찬양한 아담 스미스



혁명적 사회주의자이자 자본주의의 동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본〉의 저자 칼 맑스

크리스 하먼 주장에 대한 이몬 버틀러의 반박

우리는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길 하고 있는 것일까? 이론에 대해서, 아니면 현실에 대해서? 현실 속의 지옥 같은 자본주의와 이론 속의 천국 같은 사회주의를 비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비교하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비교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자본주의 편을 들 것이다. 비록 자본주의에서 신용경색이나 심지어 대공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스탈린과 마오쩌둥 식의 대량 학살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옹호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었다. 나는 자유시장을 옹호했다. 물론 강요와 착취를 예방해 주는 [사

유]재산, 신뢰, 계약, 경쟁, 선택 등 시장 규칙을 유지하는 데는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심판이 아니라 선수가 되려고 할 때, 정치가 시장을 망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황을 대공황으로 만든 것은 시장이 아니었다. 신용을 바닥나게 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초래한 것도 시장이 아니다. 사실 누구도 위험한 사업을 벌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간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필요로 한다. 나를 그것도 인정하지 않는 극단주의자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 그러나 정부 개입은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한 틀을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한다. 그래야 번영이 지

속될 수 있다.

자유시장이 잘 돌아가면 양쪽 모두 이득을 본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환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교역이 더 많을수록, 상호 이익이 더 커진다. 한때 폐쇄적이었던 나라가 세계 무역 체제에 동참하는 등 교역이 세계에 확대되는 것은 참 다행스런 일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부유해질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시장은 부를 만들어 낸다. 반면 사회주의 나라들은 부를 그냥 탕진했다. 몇몇 나라들은 좀더 먼저 생산적인 자본을 창조했고 여전히 앞서가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정치인들의 보호무역주의만 없다면 선진국을 따라잡고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아말로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천국이 아닐까? 하먼은 큰 정부에 맞선 투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몬 버틀러의 반박에 대한 크리스 하먼의 재반박

정부 개입이 위기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완전히 궤변이다. 현재의 위기는 민간 은행, 모기지 업체, 헤지펀드들의 행동에서 비롯했다. 그들은 사적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자본주의의 오랜 원칙을 따랐다. 이것이 그들과 우리에게 초래한 결과를 보라.

자유시장 원칙에 의존하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파산을 향해 치달았다. 조지 부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부자맞춤형 국가 개입을 통해 체제를 지탱하는 쪽으로 갑작스레 선회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 1930년

대 위기는 정부들이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도록 강요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독일이었다. 1932년 말에 대기업들은 히틀러가 권력을 잡도록 허락하는 것이 위기가 계속되는 것보다는 “차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독일과 세계를 전쟁과 야만주의로 몰아넣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위기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시도를 보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생활수준에 대한 공격이 포함된다. 이미 히틀러와 스탈린의 끔찍한 폭정 아래 죽어 간 것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매년 가난 때문에 죽고 있다.

시장은 일련의 서로 이득을 보는 자발적 교환이 아니다. 시장은 경쟁자를 지배하려 애쓰는 기업 간 그리고 국가 간의 무자비한 경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시장 참여는 경제적 갑압, 즉 살기 위해 노동해야만 하는 필요에 기반을 둔다.

시장이 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투기꾼이나 은행, 사장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다. 부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부의 생산이나 분배에 대한 발언권이 전혀 없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이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노동으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 — 그런 부를 도둑질하는 자본가들이 아니라 — 의 통제를 따르는 국가가 모든 거대 은행들과 기업들을 몰수하는 것이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③⑥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 사용자와 협력해야 하는가?

경제가 어렵거나 불황일 때 사용자들은 흔히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다. “회사가 어려우니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씩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치면 회사는 머지 않아 다시 번창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 — 특히, 사용자들 — 의 지지를 받는 매우 인기있는 주장이다. 사실, 자기 회사 노동자들의 협력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가 세상에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억압자들은 항상 피억압자들에게 협력을 촉구했다. 분명히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의 노예들이 거대한 돌을 옮겨다 피라미드 쌓는 일을 고분고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것이다. 미국의 노예 주인들은 말 잘 듣는 노예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들을 ‘가내’ 노예로 삼고 ‘들판의’ 흑인 노예들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사소한 ‘특권들’을 제공했다.

그러나 ‘노사 협력’ 주장의 문제점은 사용자들(과 물론 그들과 한통속인 정부나 언론)뿐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도 그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점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흔히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해 애를 쓰고 경영진이야말로 협력적이지 않다고 탓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실, ‘노사 협력’ 주장은 단순한 ‘상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주장의 가장 강력한 형태를 살펴보자.

상식

모종의 부품 제조업체인 X라는 회사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치자. 그 회사는 지난 2분기 동안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하고, 경영진은 회사가 파산 직전임을 시인한다. 다국적기업인 X사는 한국의 지사와 공장을 폐쇄하고, 임금이 더 싼 필리핀으로 생산 설비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노동자들이 10퍼센트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고 2년 동안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면 공장을 계속 가동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러면 신규 주문도 들어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한다. 정부도 무쟁의 협약을 지원하고, 무쟁의 협약이 지켜진다면 X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게다가 실업률도 높아서 X사가 문 닫으면 그 회사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악전고투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말처럼 들린다.

어지간한 노조 대표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이런 주장에는 즉시 반박해야 할 내용들이 들어 있다. 생산 설비를 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위협은 얼마나 현실적 일까? 다국적기업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 회사 노동자들을 협박하려 하지만, 흔히 재배치를 하면 비용이 추가로 들고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처음에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에 공장을 세운 것도 그 때문이었다.)

경영진의 약속은 믿을 만한가? 6개월 뒤 또다시 그들이 “미안하게 됐다. 당시에 한 말은 진심이었지만 상황이 더 나빠졌다. 이제 우리는 또 문을 닫거나 아니면 당신들의 임금을 10퍼센트 삭감해야 한다” 하고 말하지 않을 거라 보장할 수 있는가? 게다가 경영진의 보수 문제 등은 또 어떨까?

그러나 이런 쟁점들은 문제의 진정한 핵심이 아니다. 사용자들이 대체로 진실을 말한다고, 적어도 그들이 본 대로 그리고 그들이 알 수 있는 한은 아는 대로 말한다고 치자(나는 현실에서는 이런 가정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한다). 그런 다음에 X사가 처해 있다는 ‘곤경’이 무엇인지, 압박한 공장 폐쇄가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따져 보자. 분명히 그것이 뜻하는 바는 이윤이 남지 않는다거나 이윤이 충분히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다른 회사인 Y나 Z가 더 좋은 제품이나 더 값싼 제품을 생산해서 X사의 시장을 잠식했기 때문이거나 X사 제품을 구입하던 다른 회사들이나 관공서가 이제 더는 그런 부품을 구입하려 하

지 않아서 부품 시장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이거나 이 두 요인이 맞물렸거나 그와 비슷한 이유들 때문이다.

바닥을 향한 경쟁

이제 X사 노동자들이 10퍼센트 임금 삭감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치자. 그러면 X사는 이윤이 더 늘어날 것이고 Y사에 대한 경쟁력을 되찾을 것이다. 이제 Y사가 곤경에 처할 것이고 Y사의 노동자들이 실업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분명히 Y사의 경영진은 자기 회사 노동자들에게 X사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거론하면서 “여러분이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Y사 노동자들이 X사 노동자들처럼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면 X사와 Y사의 경쟁력 순위는 다시 뒤집힐 것이고 두 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 줄어든 것이다. 이 ‘바닥을 향한 경쟁’이 거의 모든 나라 지배계급들의 이윤 증대 방안으로 채택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이다.

이 ‘노사 협력 주장’을 돌이켜보면, 그런 주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의 능력은 자기 작업장의 동료 노동자들만을 보는 데서 더 나아가 인근 작업장의 노동자들을,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작업장의 노동자들도 볼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용자들의 전략에 대한 단 하나의 진정한 해결책은 — 이 해결책은 사상일 뿐 아니라 전략이기도 하다 — X사 노동자들이 Y사(나 Z사 등)의 노동자들과 손잡고 함께 임금 삭감과 해고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능력은 그들의 지적 이해력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들의 자신감과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자

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추상적 주장일 뿐 아니라 계산의 문제 — 우리가 여기 X사에서 저항한다면 Y사를 비롯한 다른 회사의 노동자들도 우리와 함께 싸우려 할 것인가를 따져 보는 — 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나아가서는 서로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이, 궁극적으로는 계급 전체가 서로 손잡고 함께 행동할 수 있게 해 주는 노동조합 조직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또, 혁명정당이 중요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의 작업장에는 노사 협력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일부 노동자들과 그런 주장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다른 노동자들이 있다. 이 양 극단 사이에는 이도 저도 아닌 노동자들이 있다. 심중팔구 이 중간 노동자들이 다수일 것이다. 현실의 계급투쟁 경로는 두 극단 가운데 어느 쪽이 중간에서 동요하는 노동자들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 혁명정당은 이 거부파들이 조직된 것이다. 이들은 가능하다면 모든 작업장에서,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협력파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계급의 다수를 설득해서 투쟁 속에서 계급을 지도하는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순한 주장에 근본적으로 계급투쟁의 모든 논리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자들과 협력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노동자들과 손잡고 사용자에 맞서 투쟁할 것인가. 첫째 길은 결국 인종차별·민족주의·전쟁·파시즘, 즉 야만주의에 이르는 길이요, 둘째 길은 사회주의에 이르는 길이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현대중공업의 산재 은폐를 규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계급적 불만 분출의 덕을 보는 오바마

사이먼 아사프<소셜리스트워커> 기자

버락 오바마와 민주당은 미국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여론 조사를 추적해 온 논평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 오바마가 현재 여론 조사만큼 득표한다면, 그는 압승을 거둘 것이다. 한편, 공화당은 의석 수십 개를 잃을 것이고, 동시에 상원과 하원에서 영향력을 많이 상실할 것이다.

하원에 대한 통제력뿐 아니라, 특정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작전을 펴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1930년대 이래 미국 정치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로, 1980년대 신자유주의자들이 의석을 휩쓴 이른바 ‘공화당 혁명’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오바마는 플로리다·오하이오·버지니아 주(州) 등 공화당 텃밭 지역에서도 이길 것이다. 오바마는 한때 짐 크로우 체제[남부 인종차별주의를 고착시킨 제도]의 아성이었던 조지아에서도 매케인의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다.

여론 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면, 이번 대선 운동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경제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 변화 — 계급적 불만 — 가 이 나라 전역을 휩쓸고 있다. 오늘날, 모든 미국인의 삶은 부채에 찌들어 있다.

미국 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정체된 임금을 보충하려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돈을 빌렸다. 미국 가정의 부동산 담보 부채와 기타 부채는 평균 6만 4천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의 가정은 일년에 기껏해야 4백60달러[약 55만 원]를 저축할 수 있을 뿐이다. 미국 개인 부채는 총 3조 달러에 달한다.

한 가정이 평균 8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중 두 개는 “한도 초과” 상태

다. 이제 신용카드 사용도 힘들어지면서 대부분의 가정은 임금 중 거의 절반을 모기지 부채 상황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 곤궁해졌고 부채 상황이 늦어지면서 주택 차압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 중이다.

계급적 불만

심지어 마을 전체가 집에서 쫓겨난 경우도 있고, 주택 소유자 4백만 명이 파산일보 직전이다.

파산자 강제 추방이 너무 많아 시카고의 한 보안관은 집행을 거부했다.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지 말라고 주 정부들이 은행에 압력을 넣어야 할 지경이다.

서고 있다.

매케인은 이런 분위기 변화에 대처하려고 부시와 거리 두기를 해 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보통 사람들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종차별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사라 패일린이 이런 인종차별주의적 공격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비록 패일린이 오바마의 피부색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공화당 지지자라면 모두가 알만한 [인종차별주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패일린은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 남자는 여러분과 나처럼 미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슬아슬하게 은폐된 인종차별주의는 통제를 벗어나면서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한 소도시 시청 모임에서 매케인은 오바마를 “아랍인”이라고 비난하는 지지자 손에서 마이크를 뺏아야 했다. 그리고 나서 매케인이 오바마가 “가족적이고 관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관중들은 매케인에게 야유를 보냈다.

별다른 큰 사건이 없는 한 오바마는 월가·부자·공화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에 힘입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대중의 기대 수준을 억누르려 한다. 그는 아주 제한적인 변화만 약속하고 있다.

월요일[10월 13일] 정책 설명 연설에서 오바마는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집에서 쫓겨날 사람들에게 90일의 유예기간을 주자고 제안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약간의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은 빈곤의 늪에 더 깊이 빠져 들고 있는 미국 노동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하이오 주 공장 노동자의 환영을 받는 오바마

부동산 경기 불황은 경제 나머지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자동차 거래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지지만, GM이나 크라이슬러 같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때 미국 제조업의 힘을 상징했던 기업들이 수만 명을 해고하고 미국 전역의 공장 문을 닫고 있다. 미국에서 한 달 동안에만 노동자 15만 9천 명이 정리해고됐다.

최근 여론 조사들을 보면, 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와 청년 들이 대거 민주당 지지자가 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흑인 후보에게 표를 던질 거라 기대되지 않는 백인 노동자 중 상당수도 오바마 지지로 돌아

소말리아에 군함을 보내자고?

한규한

지난달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이 탑승한 브라이트 루비호가 해적에게 피랍된 후 솔솔 피어오르던 구축함과 특수부대 파병 주장이 실사단 파견으로 성큼 진전되고 있다.

외교부는 군함을 파견한 나라의 배는 해적들이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일본, 프랑스 등 해군 함정을 파견한 나라의 선원들도 피랍된 적이 있다.

사실, 정부는 이 지역에서 해적에 의한 납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선원들의 안위는 나 몰라라 해 왔다. 지난번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은 국민 성금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더니 정부는 이번에도 “테러리스트와 협상은 없다”며 위험한 군사 대응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태의 해결책이 아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출몰이 잦은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부른 소말리아의

정치·경제적 참극 때문이다. 미국은 친미 폭두각시 소말리아 정부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슬람법정연맹에 의해 붕괴될까 봐 내전을 부추겨 왔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중단돼야 한다.

소말리아 해역은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등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미국·중국·일본·프랑스·러시아 등 주요 열강들이 ‘해적 소탕’을 빌미로 경쟁적으로 이 해역에 군함을 파견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연합 함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열강들은 친미 폭두각시 소말리아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 소말리아 영해에서 마음대로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었다. 이런 열강들의 경쟁적인 제국주의적 개입은 소말리아의 불안정과 비극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명박도 여기에 끼여들고 싶은 것이다. 이는 한국의 점증하는 소제국주의적 야심을 보여 준다. 한국 해군은 최근 급격히 증강된 원양작전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다.

한국의 반전 운동은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한국 지배자들의 소제국주의화도 저지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는 부시의 몸부림

조지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하지 않으려고 병사 1만 명을 증파하려 한다.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저항 세력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현지 사령관들의 경고를 듣고 결정을 내렸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타임스>에 부시가 임기 종료 전 “자신의 유산을 남기려 한다”고 말했다.

미 합참의장 마이크 물런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이 문제다. 단지 안보뿐 아니라 정치·외교·경제 상황이 크게 호전돼야 한다.”

미국 정부는 탈레반을 알카에다에서 분리시켜 저항세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미국 정부는 지역 저항세력과 거래를 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족 민병대”로

바꾸고 있다.

이런 조치로 나토가 아프가니스탄 군을 강화시킬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북동 지역에서 나토군이 저항세력의 반격에 밀려 후퇴했다는 소식에 뒤따른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나토군이 후퇴하는 동안 파키스탄군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접경의 부족 지역에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작전을 벌였다.

주민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난민이 됐다.

미국과 동맹들은 파키스탄에서 자신들의 작전이 저항세력을 분열시켜 알카에다에 맞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를 기원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가계 부채 등으로 날마다 대중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논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등 평범한 대중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과 대다수 정치인도 대중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의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로 대중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아래 집약한 요구들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의 논리에 도전한다. 그래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의 결집점 구실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투쟁은 위기 상황에서 우익이 득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막는 보루가 될 수 있고, 지배자들과 사용자들 공세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

물론 이 요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자본주의 체제에 명시적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개혁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요구들을 성취하기 위한 노동자 투쟁의 논리는 자본가 계급 재산권의 토대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과 우익의 반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 투쟁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훨씬 더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적 우선 순위의 복원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길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 말이다.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더 강화될 전쟁 위험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다음의 요구들을 둘러싸고 공동의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 물가 통제와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

고유가·고물가로 말미암은 노동자·서민의 고통 완화를 위해 물가를 통제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

●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직장폐쇄와 대량 해고를 단행하려는 기업은 국유기업으로 전환시켜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적절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장이다. 왜 어떤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는 한편으로 다른 노동자는 전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으로 삶이 망가져야 하는가? 임금 등 노동조건에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개선해야 한다.

●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무려 55퍼센트 정도가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

현행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적어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 FTA 반대

FTA는 단지 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와 시장화를 경제 전체에 강요하려는 것이다.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대, 식품안전 위협, 환경파괴, 공공서비스 후퇴 등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투기자본 규제

투기자본의 활동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금융위기를 부채질한다. 투기적 수익에 종속시키고 그 세수입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투기를 규제하고, 투기자본을 양성하는 관련법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된다. 교육·의료·물·전기·가스·철도·금융·지하철·정유·통신·언론·우편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한 부분은 재국유화해야 한다.

●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보장을 위한 충분한 소득원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거의 절반이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급여가 지급돼야 하고, 그 부담은 국민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노동으로 혜택을 받은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한다.

●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과 주택이 생활에 필요한 거주지가 아니라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하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 무상 의료

의료는 상품이 돼선 안 되고 예방, 치료, 재활 등 의료의 모든 분야가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

● 입시 폐지와 무상 교육

초중고 학생들은 입시 경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입시 경쟁은 사교육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자사고·특목고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대폭 증액해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등록금 인상은 중단돼야 한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의 대학 지배도 없애져야 한다.

●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정부는 대중의 요구에 대해 재원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부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그 누진율도 올려야 한다.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유사 등에도 종가세해야 한다.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대한 점령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파병 부대를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선 안 되지만, 이를 빌미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데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협력하려는 전략 한미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과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파트너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영구 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도 중단해야 한다. 군비증강 예산을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 남북한 민중의 연대를 위해

남북한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남북 적대를 이용해 민중을 억압해 왔고, 화해를 시도할 때조차 민중의 삶은 안중에 없었다. 남한 민중은 외교 논리보다 북한 민중과의 연대를 우선해야 한다. 식량 지원이 대북 압박 수단이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 민중을 위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남한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를 환영해야 한다. 또,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제국주의적 압박에 반대하면서도 북한 민중 스스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도 지지해야 한다.

●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력 강화, 인터넷·언론 통제 등 민주적 기본권을 가로막는 온갖 법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각종 보안 수사기관을 해체해야 하고, 수감 시설과 경찰·검찰·군대 등에 대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배심원제의 도입 등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패 공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부패 기업은 국유화해야 한다.

● 여성과 소수자 차별 반대

여성·이주자·장애인·동성애자 차별 등 부당하며 운동을 분열시키는 온갖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여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무상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 낙태 금지법, 간통죄 등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모두 폐지돼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출입국과 취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지구 온난화 중단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더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핵 에너지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역사회포럼

동대문중앙 지역사회포럼
오바마가 부시와 다른 미국을 만들 수 있을까

연사_ 조명훈
10월 23일 (목) 오후 7시 30분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과학관 301호
문의 02-2271-2395/011-9987-3600
참가비 1천 원

성동광진 지역사회포럼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연사_ 정종남
10월 23일 (목) 오후 7시 30분
여성능력개발원 3층 3강의실 (건대역 6번 출구)
문의 011-9038-0657
참가비 2천 원

중부 지역사회포럼
케인스나 맑스나 — 누가 위기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10월 29일 (수) 오후 8시
임호빌딩 701호(종로5가역 2번 출구 이화예식장 옆)
문의 010-7326-3286

북부 지역사회포럼
이명박은 양복 입은 히틀러인가

연사_ 장호중
10월 21일 (화) 오후 7시 30분
성북도서관 2층 성북세미나실 (6호선 상월곡역 4번 출구)
문의 010-5544-4285
참가비 2천 원

남부 지역사회포럼
흔들리는 미국 패권 — ‘신냉전’은 오는가

연사_ 이수현
10월 24일 (금) 오후 8시
서울고대 학생회관 2층 토틀루

강원 지역사회포럼
미국 대선 — 오바마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연사_ 강철구
10월 30일 (목) 오후 7시 30분
팔오광장 광장서적 2층 북카페
문의 010-9805-1050

전주 지역사회포럼
케인스나 맑스나 — 누가 위기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긴급 강연회] 맑스주의는 현 세계경제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참가비: 각 강연 당 2천 원 주최: 다함께

○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1930년대 대공황으로 가는가

장시복(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11월 12일(수) 오후 7시, 부산대(추후 공지)
11월 14일(금) 오후 6시 30분, 건국대 상허관 316호

○ 자본주의는 왜 경제 위기를 낳는가 —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이정구(경상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10월 29일(수) 오후 7시, 연세대(추후 공지)
10월 30일(목) 오후 6시 30분, 중앙대 문과대 2716호

〈저항의 촛불〉독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토론해 볼 만한 주제들

- 세계경제는 왜 붕괴하는가
- 케인스나 맑스나 — 누가 위기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맑스주의는 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고장난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 변화를 원하는 미국 — 오바마가 변화를 가져다 줄까
- 7년째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학전
-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이 부활했는가
- 이명박 정권은 파시즘인가
- 반이명박 국민전선의 정치학 —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연합해야 할까?
- 왜 사회 변혁 정치 단체가 필요한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안들

25도를 넘나드는 한낮 기온에 가을의 묘미를 잃어가고 있듯이 지구온난화는 현실 그 자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연구해 온 저명한 환경운동가 조지 몬비오는 《CO₂와의 위험한 동거》에서 긴급하고 고민의 흔적이 물씬 풍기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기후학자들의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1.4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고작 탄소배출량의 5.2퍼센트 감축만을 의무화한 교토협약은 이것을 이룰 수 없다.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평균 90퍼센트 정도를 감축해야만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단호한 온실가스 감축은 지금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



《CO₂와의 위험한 동거》(조지 몬비오, 홍익출판사)



《원자력은 아니다》(헬렌 칼디코트, 양문)

저자는 현대 문명을 포기하고 산업사회 이전으로의 회귀를 주장한 환경론자들을 비판한다. 몬비오는 “산업과 문명의 양립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가스 연소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해 ‘전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면 전력 체계의 탄소 배출량은 현재의 15퍼센트 이하가 될 것이다. 여기에 주택·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과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운송체계를 도입한다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상상력

몬비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함을 증명했다. 그러나 그도 밝혔듯이 이것이 “정치적으로 가능한지를 증명해” 보이지는 않았다. 탄소 배출량을 90퍼센트 줄이는 현실적 방안의 ‘실현’은 저자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운동에 달려있다.

그런데 조지 몬비오는 탄소 감축의 목표 ‘만’을 고려하다보니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한 듯하다. 그는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노천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방법보다 원자력을 우선순위에(끝에서 두 번째) 둔다. 물론 그는 확실한 대안은 재생에너지라고 한다.

몬비오의 핵발전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헬

렌 칼디코트가 쓴 《원자력은 아니다》를 통해 일소해 버릴 수 있다. 세계적 반핵운동가인 저자는 원자력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 에너지라거나, 태양·풍력 발전보다 경제적 에너지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체인이 달린 톱으로 버터 1파운드를 자르는 것”에 비유될 핵 발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덴마크 인들은 핵발전소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내 아이들이 다섯 손가락을 가지길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에너지는 안 된다고 선택했습니다”라는 핵발전소 반대자의 이야기는 핵의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다만 저자가 내놓은 해법은 정치적으로 불충분하다. 헬렌 칼디코트는 개인의 에너지 절약형 생활방식과 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을 주장한다.

이러한 해법이 불평등한 체제를 바꾸려는 조지 몬비오의 대안들과 접목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현실적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정

김민정은 성공회대 대학원에서 환경사회학을 전공하고 현재 조선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이다



《언더 더 세임 문》(패트리시아 리건 감독, 2007)



이주자의 역경과 희망

10월 16일에 개봉하는 영화 《언더 더 세임 문》은 멕시코에서 LA로 넘어와 불법 이주노동자 생활을 하는 엄마를 찾아, 혼자서 국경을 넘는 9살 소년 칼리토스의 여정을 그린 로드무비다. 이 영화의 진정한 매력은 우연과 과장으로 진부해진 ‘엄마 찾아 삼만 리’를 넘어서는 데 있다.

영화는 칼리토스의 여정 위에 멕시코 이주노동자들의 눈으로 본 미국 남부의 현실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이주자들의 군상을 숨씨 있게 엮어 낸다.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이주자들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겨주는 커플, 농약 때문에 얼굴에 손을 잘못 댔다가는 살점이 떨어지는 토마토 농장에서 일하는 멕시코·중국 계 이주노동자들, 노임을 떼여도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제대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김준호

이런 장면들 위에서 칼리토스는 단순한 아홉 살 어린아이가 아니라 멕시코 계 이주노동자들의 초상화다. 도망치고, 힘들게 일하고, 안정 따위는 꿈도 꿀 수 없지만 낙관과 인간애를 잃지 않는 칼리토스의 모습은 희망을 감동적으로 표현한다.

시민권을 따려면 미국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는 칼리토스의 엄마에게 동료가 던지는 농담은 그 자체로 훌륭한 블랙코미디다. “아주 쉬워요. 처음엔 불쌍한 인디언들을 착취했고, 나중엔 노예들을 착취했죠. 지금은 멕시코인들을 착취하고 있고요!”

영화는 뒤로 갈수록 묘미를 더한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훌륭한 메시지와 진한 감동, 완곡을 조절하는 영상 편집과 맛깔스러운 음악을 함께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히 권한다.



영화 《바시르와 왈츠를》의 한 장면

제9회 유럽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

10월 22일(수)부터 26일(일)까지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아홉 번째 유럽영화제가 열린다. 칸·베니스·부산 영화제 등에서 호평받은 영화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동성애를 왜곡 없이 묘사한 영화로 평가받는 스릴러 《추적》이 개막작이다.

주택단지, 파업 현장, 공장들을 돌며 유럽 사회의 이면과 모순을 다뤄 온 다르덴 형제가 연출한 《로나의 침묵》은 알바니아 출신 불법 체류자 로나가 벨기에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겪는 식막한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이스턴 프라미스》는 현대사회의 모순을 폭로하는 영화로

추천할 만하다.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결합시킨 《바시르와 왈츠를》도 추천할 만하다. 감독은 1982년 레바논 전쟁에 직접 참전했는데, 당시 동료들을 인터뷰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되살려냈다.

켄 로치 감독과 더불어 영국 노동계급의 삶과 인종차별 등을 특유의 연출력으로 다뤄 온 좌파 성향 감독 마이크 리의 로맨틱 코미디 《해피 고 럭키》, 타셈 싱 감독의 초현실적 판타지 영화 《더 폴》,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북유럽 영화들도 스페셜 섹션으로 준비돼 있다.

최윤진

자세한 내용은 <http://www.meff.co.kr> 참조



국제중학교와 공정택에 반대한 촛불시위

10월 13일 중곡역에서는 '대원중학교 국제중 전환반대'를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렸다. 3일 전에 급박하게 잡혔지만 '대원중학교 국제중 전환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및 학부모연대'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학부모 등이 70여 명이나 모였다.

촛불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현 학원 원장들에게 받은 돈에 대한 보은으로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냐"며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9월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 71퍼센트가 국제중 설립에 반대했다. 국제중 열풍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학원 등록율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중학교 입학에 유리하다는 학생회장이 되기 위한 노력도 상상을 초월한다. 초등학교 학생회장 연설문을 대신 써주는 대필 사이트, 선거 포스터 제작

등 모든 업무를 대신 해 주는 전문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돈으로 만든 학생회장'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홍보물을 수 만장 배포하며 국제중 전환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원중학교가 있는 중곡동은 중학교가 부족해 학생 수백 명이 만원버스에 시달리며 먼 거리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부족한 중학교를 확충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중학교를 국제중학교로 전환해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분노는 더했다.

경찰은 계속 압력을 가했지만, 촛불시위는 퇴근길 시민들의 성원을 받았다. "꼭 막아달라"며 대책위에 성금을 전달한 주민도 있었다.

류민희

중랑에서도 시작된 '촛불 시즌 2'

10월 11일 오후, 면목역에서 '미친소 수입 반대! 의료·물·교육·공기업·방송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비정규직 확대 반대! 공안탄압 반대!' 촛불문화제가 진행됐다.

소식을 듣고 각 지역 촛불 카페 회원들, 전교조, 이랜드노조 등 각 단체, 지역주민 등 3백 명 이상이 면목역을 가득 채웠다.

미친 교육 반대 페이스페인팅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이명박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지구 밖으로 보내 버렸으면 좋겠어요"라며 불만을 성토했다. 사진전을 보던 할머니는 "경제도 못 살리고 살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된다" 하고 말했다.

이날 1부 행사를 장식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이명박 정책을 낱알이 비판해 큰 박수를 받았다.

2부 행사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영주 선생님은 이명박의 미친 교육과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아이들을 위한 참



10월 11일에 열린 중랑 촛불문화제

교육을 하자고 발언해 큰 호응을 얻었다.

중랑 촛불문화제에서 제2의 촛불 향정을 위한 투쟁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장미순

이렇게 합시다



10월 9일 다함께 주최의 경제 위기 토론회 — 3백 명이나 모여 체제의 근본 문제와 대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급진화 움직임을 놓치지 말자

세계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특정한 정책이나 모델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라는 급진적 주장에 대한 청중을 늘리고 있다.

10월 9일 '다함께'가 주최한 장시복 교수 초청 토론회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 — 1930년대 대공황으로 가는가?'에도 평일 저녁이지만 3백여 명이나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장시복 교수는 맑스주의 관점에서 이번 경제 위기가 1990년대에 일시적으로 올라간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금융 투기를 낳아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력한 투쟁과 근본적 사회변혁을 주장한 발언들도 큰 지지를 얻었고, 맑스주의로 세계경제를 설명한 장시복 교수의 책들도 모두 판매됐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위기를 통해 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고민하고 변혁적 대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을 보여 줬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이번 위기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고 이윤이 아니라 대중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체제로 사회를 근본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더 적극적인 선전·선동·조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단순한 평론가가 돼서는 안 된다. 자신의 주변과 직장, 학교 등에서 저항을 조직하고 적극 참가할 뿐 아니라 투쟁의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저항의 촛불>을 판매하고 토론하고 조직하자

'단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다'라는 헤드라인의 <저항의 촛불> 8호가 서울의 거리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 대입구역 공개 판매에서 35분 만에 47부가 판매되는 등 주요 거리에서 수백 부가 팔렸고 지금까지도 수만 원이 모였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 온갖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거리 공개 판매는 아주 중요하다.

'다함께' 같은 변혁적 좌파는 저들의 위선과 왜곡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경제 위기의 진정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좌파적 대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 위기에 움츠러든 사람들에게 이 잔혹한 체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대의와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거리와 대학에서 다함께 회원들의 자신감 있는 선동과 주장은 물가인상과 임금 동결, 복지 후퇴 등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쓰라린 심정을 속 시원히 대변해 주는 청량제와 같았다. <저항의 촛불>을 공개 판매한 곳곳에서 "웁소! 웁소!", "파이팅" 하는 호응과 격려를 들을 수 있었다.

혜화역 가판에서 한 전교조 교사는 "당신네 말

이 맞다. 구제금융 정도로 지금 사태를 해결 못한다. 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인 것 같다"며 신문과 소재자를 사 갔다가 다시가 판대로 찾아와 수고한다며 간식을 사다 줬다.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금의 사회 운영 방식 —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인 — 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생각해 보게끔 한다.

따라서 더 많은 다함께 회원들과 <저항의 촛불> 독자들이 공개 판매에 함께하고 주변 동료들, 촛불집회 때 만났던 사람들에게 <저항의 촛불>을 권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저항의 촛불>이 주장하는 대안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해 보기 바란다.

이 속에서, 노쇠해져 거친 숨소리를 몰아쉬는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항의 촛불>은 그런 사람들을 묶어 주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주간
<저항의 촛불>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_2만 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1년_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resistcandle.com

reader@resistcandle.com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봐주세요.

www.alltogether.or.kr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기업들이 광고주인 주류 언론은 진실을 은폐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개인이라면 저항할 힘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저항의 촛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홍보전을 벌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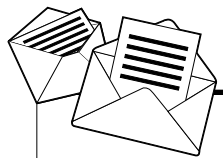
대중 행동에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해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였던 '뚜장상블'(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고와 편지를 환영합니다.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10월 20일(월)까지 마감시간을 꼭 지켜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지면 관계상 실리지 않은 독자편지는 온라인에 실립니다.

‘달러 모으기’ 대신 ‘투쟁 모으기’를 해야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한목소리로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며 10년 전과 같은 주문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는 IMF 때 ‘금 모으기’를 떠올리게 하는 ‘달러 모으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같은 당 김영선은 “지금 외환보유고가 문제되는 데 집집마다 100달러, 500달러는 있을 수 있다. 전 국민이 외화통장을 만들면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은행에서 외화통장을 개설하는 쇼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싸늘했다. 다음 아

고라에 올라온 달러 모으기 반대 서명에 하루만에 1천 명 넘는 네티즌들이 참가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1년에 평균 수억 원의 재산을 증식한 자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서민들에게 ‘달러 모으기 캠페인’을 제안한 것은 위선적이다.

위선

IMF 때도 그랬다.

당시 김대중도 “아랫목(부자들)이 따뜻해지면 윗목(서민들)에도 온기가 갈 것”이라며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

했다. 금 모으기 캠페인은 경제적 효과보다, 권력자들과 사장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전담’을 강요하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컸다.

서민들은 결혼예물, 백일이나 돌 때 받은 반지 할 것 없이 내 놓으며 캠페인에 동참했지만, 기업 임원과 땅부자들만 살기 좋아지고 노동자·서민의 삶은 더욱 열악해졌다.

금 모으기 경험은 저들이 고통을 전담하도록 투쟁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

모승훈

IMF 때보다 나은 투쟁의 조건

〈저항의 촛불〉 8호의 ‘양보하거나 투쟁을 회피해선 안 된다’란 기사에서 IMF 위기 때 벌어진 노동자 투쟁의 교훈을 분석하며 현재 일부 노조 간부들의 투쟁 회피적 태도를 비판한 박종호 씨 주장은 정당하다.

덧붙이자면, IMF 위기는 노동자들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라 매우 혼란스러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당시 정부는 오랜 야당 투쟁 역사를 통해 ‘개혁적’ 정부로 기대를 모은 김대중 정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들이 달러 모으기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IMF 때와 태도가 사뭇 다르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노골적인 우파에 반노조 입장을 가진 이명박이다.

게다가 촛불시위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노조에 대해 보이는 태도 또한 호의적이다.

1997~98년 위기 때와 달리 이처럼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서마저 일부 노조 간부들이 투쟁을 회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때마저도 싸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싸워야 하나?

가야

거리낌 없이 반자본주의를 주장할 때

〈저항의 촛불〉 8호는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가 ‘단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다’ 하는 급진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다.

나는 이 헤드라인이 속 시원하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무 센 주장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한편에 있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10월 10일 〈저항의 촛불〉 명동 거리 판매에서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은행 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한 거리 판매에서 준비해 간 〈저항의 촛불〉 29부가 40분 만에 모두 동이 났다.

신문을 권했을 때 1면을 보고 섣뚱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현 경제 위기로 인한 불안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가 광범하게 존재하며, 한편으로는 이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높은 관심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경쟁과 착취를 낳는 자본주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지만, 동시에 급진적 의식이 싹틀 수 있는 발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지금의 문제들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것과 그 대안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에 귀 기울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영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리(이명박)·만(강만수) 브러더스’

2008년 초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 당시, 이명박은 자신이 “경제 좀 해 봤다”며 “위기는 없다” 하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취임 초부터 분노의 촛불이 타오르자 정부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며 위기설을 유포했다.

그러다 ‘9월 위기설’이 나돌자 이명박은 “IMF 같은 위기를 맞아 경제 파탄을 맞을 일은 결코 없다. 위기란 말은 위기감·긴장감을 주겠다는 뜻”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러나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이명박과 강만수는 외환보유액을 마구 쏟아붓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적극적 개입”을 하다가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이제 “환투기꾼” 운운하며 짜증을 내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길 요량이다.

이명박은 정부를 “신뢰”해 어려움

을 극복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허둥대기만 하던 저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직후 모든 일간지에 게재된 미래에셋의 광고는 저들의 바람을 노골적으로 보여 줬다. 그 광고는 “살아남은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겪으며 퇴출된 기업의 몫까지 가져가게 된다”면서 “불황을 즐기”고 “행복한 주주가 될 수 있다”며 부자들을 응원했다.

우리는 저들의 무능, 위선, 거짓말을 폭로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고도 거액의 퇴직금과 비자금을 챙기는 사장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가 아니라 진정 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로운 민주적 계획경제가 가능함을 설득해야 한다.

강영만

금융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어느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금 손실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자살했다는 기사를 봤다. 2008년 1월 경에도 주변인들의 투자금을 손실했다는 부담으로 금융 노동자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봤다.

이것은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인데 노동자들이 투자자의 손실이 자신의 무능함이라고 생각하면서, 귀중한 목숨을 끊는 것은 결코 어서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금융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투

자자(물론 거액투자자도 있지만, 소액투자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사이에서 중간자로 끼여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그들이 이런 체제를 비판하고 지금까지 이윤만 가져갔던 자본가들을 폭로하고, 싸우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이 투쟁에 나설 때 지지하고 방어해야 한다.

홍기현

이 시대의 ‘바우하우스’를 꿈꾸며

〈저항의 촛불〉 8호에 실린 바우하우스에 관한 글을 보고 나서 바우하우스 전시회를 보고 왔다. 그곳에서 난 우리가 쓰고 있는 주전자나 컵·의자 등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고급스러운 귀족문화만을 문화라 여겼던 시기에 바우하우스는 가볍고 값이 싼 물품들을 만들어 서민에게 보급했다.

여러 사람의 눈물나는 희생을 거쳐 지금 우리 시대를 빛내고 있는 것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서민을 위한 제품

현재 자본주의에서도 경제가 ‘하강곡선’을 타게 되면 우선 주머니를 부여잡는 사람은 서민이다. 서민의 소비는 줄어든 반면 상위 1퍼센트의 소비는 1백10퍼센트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상위 1퍼센트를 위한 제품들은 하루가 멀다고 발전하는 반면, 우리 서민을 위한 제품들은 제자리걸음만 하는 실정이다.

명품구두를 만들기 전에 장애가 있기에 보행이 힘든 분들을 위한 구두를 만들 생각을 해 봤던가. 수입 자동차를 들여올 때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발이 되는 자동차를 만들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계급차별이 난무한 이 시대에 바우하우스는 다시 생겨야 한다.

윤지혜

다 함께 참가합시다!

촛불 문화제 —
1% 특권층, 너흰 아냐

일시: 10/18(토) 오후 6시
장소: 청계광장

민주주의 페스티벌
“1%강부자정권에 맞서는
99% 희망 만들기”

일시: 10/25(토)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공원
주최: 99% 국민희망만들기 행사위원회



10월 11일 서울역에 철도 노동자 3천여 명이 모여 민영화를 반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짓밟지 말라



농성장 철거에 충격받아 실신한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

15일 새벽,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회사가 동원한 용역강패가 들이닥쳐 농성장을 폭력 철거했다. 강패들은 조합원들과 네티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소연 분회장은 실신해 병원으로 실려 갔고, 경찰은 강패들을 비호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2005년 법정 최저임금 64만 1천8백40원보다 겨우 10원 많은 기본급을 받고 하루 10시간씩 일하다가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자 노동부조차 이미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는데도 회사는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그 후 노동자들은 1천 일 넘게 투쟁해 왔고, 얼마 전에는 1백 일 넘는 단식 투쟁까지 했지만, 사측과 정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저항 수단인 농성장마저 짓밟은 것이다.

“비 올 때는 우산을 뺏지 않는 게 소신”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 기업주와 부자들 쥔겨주고 있는 이명박은 정작 소나기를 맞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치고 있다. 이명박은 심지어 기륭전자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양보할 듯하자, 국정원까지 동원해 노조와 합의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나아가 비정규직 악법을 더 개악하려고 한다.

이런 공세에 힘입어 지난주에는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농성장에 대한 폭력 침탈도 있었다.

지난한 투쟁 속에서 기륭 노동자들은 함께 투쟁하던 권명희 조합원을 암으로 잃었다. 그러나 기륭 노동자들은 불굴의 투지를 꺾지 않고 있다. 기륭전자의 위성라디오를 주로 수입하는 미국 업체에 노동탄압의 실상을 알릴 원정 투쟁도 시작했다.

이명박은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며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 하지만, 기륭전자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는 광범하다.

연대와 투쟁을 통해 재벌·부자만 보호하는 이명박의 우산을 빼앗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쥐어 주자.

최미진

비정규직 철폐!
열사정신 계승!
2008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

“사람은 결코
일화용품이 아니다”

일시: 10/26(일) 오후 2시
장소: 대학로
주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조직위원회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공공부문의 단호한 연대 파업을 건설하자

10월 10일 이명박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조중동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 위기와 지배계급 내의 분열, 촛불의 여파로 공기업 민영화가 애초보다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경쟁 도입’과 ‘경영 효율화’ 등으로 민영화에 버금가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철도뿐 아니라 가스, 전기 같은 에너지 산업도 3차 선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가스 요금은 앞으로 2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서울역에서 철도 노동자 3천여 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3차 선진화 방안을 규탄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철도 민영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2011년까지 4천여 명을 감축하고, 전환배치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적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엄청난 철도 건설비용을 철도공사에 떠넘겨 왔기 때문에 발생했다. 2002년 이후 철도 노동자는 15퍼센트나 줄었고, 장애인 할인 축소 등으로 공공성은 축소돼 왔다.

나아가 철도 민영화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과 대형사고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철도노조는 11월에 민영화를 막기 위해 전면파업에 나서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노조가 필수유지업무를 지키며 합법파업을 하

려다 투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분열만 낳은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공공부문의 파업권을 부정하는 악법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싸우는 길만이 모두 사는 길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하려는 가스, 전기, 물 등의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함께 싸워야 한다.

공공운수연맹 산하 철도, 지하철, 가스, 발전, 공항 등의 ‘기간산업공동투쟁본부’는 10월 총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중순 연대 파업을 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반드시 실행돼야 하고 지금부터 현장에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각개격파하려는 정부의 꿈수에 당하지 말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동시에 위력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조명지

위기의 책임을 금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은행연합회 회장 유지창은 10월 2일 금융노조에 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임금 시비로 인한 ... 부정적 인식도 해소할 수 있”고 “고객인 가계·기업과 어려움을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도 있는 듯 포장하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유지창의 발언 일주일 뒤, 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들의 손실액을 감당 못해 자살했다. 현재 국내 펀드는 손실률이 30퍼센트대를 넘어섰고, 해외 펀드는 원금이 절반 이상 남아갔다. 이 탓에 일선 금융 노동자들은 항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똥을 포장해 보낸 고객이 있는가 하면 지점에 온 가족이 항의를 오고, 자해 소동이 벌어진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작자들은 무사태평이다. 이명박은 이 와중에 “나라면 지금 펀드에 가입할 것”이라며 약 올렸다. 이명박 발언 뒤 주가는 1백 포인트나 더 폭락했다.

투기 거품에 금융 노동자가 원인을 제 공한 것도 아니다. 동북아 금융허브 운운하며 금융 투기를 부추긴 것은 노무현 정부였다. ‘당선하면 주가 3천 달성’ 운운하며 환상을 키운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신(新)파생상품을 내용 속지도 없이 마구잡이로 내다 팔도록 강요한 것은 금융사 경영진들이었다.

한편, 정부는 ‘키코’로 손실을 본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

금을 통해 40퍼센트까지 보증을 서줬다고 발표했지만, 서민 고객의 반 토막 난 펀드에 대해선 모르쇠다.

노인들의 쌈짓돈을 날려 버렸다는 가책에 일부 노동자들은 자기 돈을 털어 손실액 일부를 메워 주고 있지만, 막상 금융사들은 실정법을 앞세워 지원이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을 수용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금융 노동자들은 지배자들의 가증스러운 행태를 폭로하면서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고유한 요구와 함께 금융 위기 피해 서민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와 지원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

김문성